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 세미나

# 생태 평화와 북한 SDG

시간

2020. 12. 16. (수) 14:00-18:00 오후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ZOOM 회의 ID** 8675878574



## 목 차

---

### 개회사

---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평화 개념 **05**

황수환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발표 2** SDG와 북한: '지속가능'과 '발전'의 긴장 가능성 **15**

이경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발표 3**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그린뉴딜' 남북경협 **25**

윤석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토론요약문 & 자유토론 및 답변** **31**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경희 (세계자연기금)





**발표 1**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평화 개념**

---

**황수환**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발표문(2020.12.16)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평화개념

황수환

### 1. 기존 평화개념에 대한 사고의 확장 필요

2020년 7월 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의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신뢰가 하락하고 내부에서 불안과 폭력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적 혼란이 결국 국제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화구축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약 10억 명 넘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1억 35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상황이 가중되고 있고 보건인력이 일상적인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sup>1)</sup>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광범위한 위기와 위험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화의 개념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협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평화의 개념 역시 확장이 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협과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과 수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세기에는 평화의 개념은 주로 국가 간 분쟁해결,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관리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 다뤄졌다. 1~2차 세계대전, 냉전 등 대규모 전쟁, 위기와 긴장상황을 거치면서 국가 간의 무력충돌이 평화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 인식했기에 20세기의 평화연구는 개별국가의 주권보호, 영토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학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다 볼 수 있다.<sup>2)</sup> 특히 냉전시기에는 이데올로기적 체제대립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 개별국가의 평화를 위한 국가안보가 체제안보 혹은 진영안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평화학과 안보학의 쌍생아적 발전’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sup>3)</sup>

1) “유엔 총장 ‘코로나19, 글로벌 평화·안보 위기로 번져,’” 『뉴시스』, 2020.7.3.  
 <[https://newsis.com/common/?id=NISX20200703\\_0001082241&method=](https://newsis.com/common/?id=NISX20200703_0001082241&method=)> (검색일: 2020.8.4.).  
 2)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p. 18.  
 3)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평화의 개념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정의가 가능하다. 고전적 의미의 평화는 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평화가 달성되었다고 인식한다. 이는 마치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건강이라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는 다양한 폭력적 상황을 극복하는 형태로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안보의 개념 역시 국가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와 같이 개인과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항상 폭력과 갈등이 존재한다. 남북 간에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따른 신냉전체제의 도래가 예상된다.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테러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세대 갈등, 성차별, 이념 분열, 빈부 격차 등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기에 평화를 논하기 전에 폭력과 갈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폭력이 왜 발생하느냐의 원인뿐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해야 평화를 온전히 파악하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평화는 폭력과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상태가 아닌, 억제하고 조정하고 제어하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폭력과 갈등은 상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화의 개념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집단적,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평화구축의 개념을 단순히 전쟁의 부재라는 의미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학(peace studies)에 대한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평화학은 폭력과 갈등의 발생과 재생산을 규명하여 갈등의 전환을 평화적으로 모색하는 학문이다. 평화학은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탐구하는 다학제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자 다문화적, 실천적, 연대적 학문이다. 평화학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를 관여시켜 평화의 상태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모색하는 학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평화학은 1, 2차 세계대전을 이후 주로 국가 간 분쟁해결, 국제관계와 국제질서의 관리 및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뤄졌다. 20세기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체제대립으로 평화학과 안보학의 쌍생아적 발전이 나타났다.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세계적 차원의 전쟁 위험 감소로 인해 평화학이 쇠퇴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했지만, 종족 및 종교 분쟁, 정체성 갈등, 문화적 억압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학적 관점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 평화학 이론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인권, 민주주의, 발전, 불평등, 차별 등 인간사회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범위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 평화학은 인간 개인의 삶과 보



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지향적, 생태지향적 학문으로 확대하여 발전하고 있다. 1992년 UN에서 ‘평화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면서 예방, 평화형성, 평화유지, 평화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1998년 유엔은 교육을 평화문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든 인권의 존중, 양성평등, 민주적 참여, 관용과 연대, 참여적 대화와 지식의 자유로운 소통, 국제평화와 안전 등 8개의 항목을 실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들이 평화학의 주요의제로 등장하게 된다.

## 2. 새로운 평화구축 연구와 개념

최근 평화연구는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학과 대비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삶과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상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치 지향적, 생태 지향적 학문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여러 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바라쉬와 웨벨(D. Barash and C. Webel)은 적극적 평화가 협력, 평등, 조화, 정의, 사랑 등으로 복합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sup>4)</sup> 룩 레이클러(Luc Reychler)는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갈통(Yohan Galtung)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통합을 시도했다.<sup>5)</sup> 평화상태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연구 성과가 있다. 진티(R. Ginty)는 탈냉전 이후 발생된 다양한 갈등적 양상을 고려하여 평화연구의 흐름이 혼종(hybrid)된 차원에서 복합적인 영역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sup> 지속가능한 평화의 조건으로 효율적 대화와 협상 시스템, 평화를 증진하는 정치·경제·안보 구조, 평화 지도자와 비판적인 대중, 다자적 협력 지원 시스템, 통합적 분위기 등을 제시했다. 이후 진티(R. Ginty)는 일상적 평화의 개념에 대해 제시하여 기존 평화연구 인식의 확장을 시도했다.<sup>7)</sup>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기존 평화연구의 한계와 틀을 벗어나 통합과 확장을 시도했다. 월렌스틴(Peter Wallenteen)은 분쟁 후 평화구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를 제시했다.<sup>8)</sup> 양질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평화의 수준을 높일수록 일정한 기간 동안 전쟁이 재발되지 않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양질의 평화는 안보(security), 존엄(dignity), 내구성(durability)이 보장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보상황이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4) David P. Barash and Charles P. Webel 지음, 송승중·유재현 옮김, 『전쟁과 평화』 (서울: 명인문화사, 2018).

5) Luc Reychler, “Challenges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1, no. 1 (2006), pp. 1~16.

6) Roer Mac Ginty, “Hybrid Peace: The Interaction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Peace,” *Security Dialogue*, vol. 41, no. 4 (2010), pp. 391~412.

7) Roer Mac Ginty,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Security Dialogue*, vol. 44, no. 6 (2014), pp. 548~561.

8) Peter Wallenteen, *Quality Peace: Peacebuilding, Victory, & World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기본적 존엄이 보존되는 상황이 양질의 평화라 주장했다. 쿠퍼(C. A. Kupchan)은 전쟁의 확률이 0%에 가깝고, 새로운 정체성과 평화공존 및 연합 등 안정적인 공동체가 설정되는 안정적 평화(stable peace)를 주장했다.<sup>9)</sup> 쿠퍼가 제시한 안정적 평화는 4가지 측면에서 구성되는데 첫째, 선제적 포용을 위한 단독적 합의(unilateral accommodation), 둘째, 제도구축 등 상호규제(reciprocal restraint), 셋째,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 넷째,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 발생(generation of new narratives and identities)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도구축 부분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참고할 수 있고, 사회통합 부분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된 남북 간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3. 새로운 평화구축의 연구방향

평화구축 관련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요소를 해결하는 과정과 상황에서 과거의 소극적, 적극적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평화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그 대처방안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례와 요소 간 연결을 통한 융합적 평화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안정적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라는 과거의 평화연구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법의 한계를 넘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평화구축의 개념을 평화의 융합화, 평화이슈들 간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인간중심의 평화 등 3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평화의 혼종화, 융합화, 복합화가 있다. 최근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위협은 지역, 이슈, 범위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슈와 범위의 측면에서는 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과 위협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사이버, 보건, 환경, 난민 등 복합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대혼란 현상으로 전 세계가 뉴노멀(new normal)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뿐만 아니라 분단체제로 인한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합적 갈등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화된 평화의 논리가 아닌 혼종적이고 복합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화구축을 위한 각 이슈들 간의 연결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평화의 개념은 단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벗어나 환경, 생태, 경제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개념은 '평화'라는 성질에

9)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 1~15.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연속되는 시간적 연결과정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평화담론, 평화구상, 평화실천들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축을 요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논의나 구상이 구체적인 현실성과 실천성을 지니려면 불가피하게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성을 통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평화’는 사회내의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와 행복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과 대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관련 당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파괴적인 갈등과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필요 없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0)</sup> 또한 평화의 구축과정은 결코 분절적이거나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 및 요소 간 연결을 통해 순환적인 속성을 지닐 때 평화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sup>11)</sup>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각 구성요소들이 국제적, 국내적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갈등의 복합적 양상으로 회귀하며 순환한다고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가 어떤 특정 공동체의 관점에 기초해 고립된 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현실적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평화는 결국 특정한 시대와 공간으로 분절되거나 구축될 수 없는 인간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중심의 평화가 있다. ‘연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화’의 패러다임은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상적 평화의 개념과도 연계된다. 반평화적 상황이 초래되어 인간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평화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같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고착화된 갈등이 인간중심적 지속가능한 평화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수적이며, 분쟁에 따르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화해가 중요하다. 평화의 구상과 실천은 이렇게 인간적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일상적 삶의 방식에 대한 현실적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하향식(top-down) 방식과 상향식(bottom-up) 방식 모두를 고려한 인간중심적 평화를 위한 노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 4. 結: 한반도 상황의 적용

평화학의 학문적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평화구축에 대한 주제를 한반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해석할 수 없을까? 우선 2018년 잠시 한반도에서 평화가 도래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과연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할

10) Peter T. Coleman, "Conclusion: The Essence of Peace? Toward a Comprehensive and Parsimonious Model of Sustainable Peace," in Peter T. Coleman and Morton Deutsch eds. *Psychological Components of Sustainable Peace* (New York: Springer, 2012).

11) 존 폴 리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2), p. 193.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이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추구할 평화는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되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넘어, 인간과 환경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평화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정전체제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 내외부적 문제에 대해 평화학적 관점에서 대안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정신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적 평화학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분단상황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된 폭력적이고 적대적 상황을 극복하여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이 실현되는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분단체제 속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평화연구와 담론이 정치적인 견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대립적 양 진영 간 극단적 주장으로 인해 한반도발 평화연구는 분절성과 폐쇄성을 띠게 되고 이에 따라 평화 관련 제반 연구의 토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평화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 양질의 평화, 정의로운 평화, 문명화로서의 평화 등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하여 그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는 크게 국제적 차원, 남북한 차원, 국내적 차원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갈등이 존재한다. 냉전체제, 분단체제로 인해 한반도, 동북아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차별, 불평등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전적 사고에서 구분한 평화의 개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위기와 군사적 갈등과 같은 냉전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평화론을 넘어 사회적 억압, 차별, 불평등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의 해소와 보편적 인권의 신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소위 '융합적 평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 평화 개념으로서 단순히 '전쟁 없는 평화'에서 벗어나 치유의 평화, 관용의 평화, 화해의 평화, 용서의 평화로 확산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나 아니냐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갈등과 위협 속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힘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간에도 나이, 성별, 임금, 학력수준, 학벌, 지위, 인종 등이 차이에 따라 힘의 등급이 구분된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그저 다양한 특징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 간의 '다름'과 같다. 무언가를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는 자체가 폭력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남북 간의 격차로 인한 차별 역시 폭력이라는 것이다. 차이는 격차가 아니라 다름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평화’는 사람들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정보의 부족으로 생긴 오해 등에 의해 위협과 무시를 받았다. 국제관계나 남북관계나 개인의 일상에서나 나와 관계하는 대상을 악마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폭력을 발생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 적대적인 세계관, 폭력적인 세계관이 아닌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평화구축연구는 아직 정교되지 않았지만 평화주의, 평화의 미시적 측면, 아래로부터의 시각, 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연구는 관점, 영역, 방법, 행위자, 정책 등에 걸쳐 대안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평화와 안보연구에서의 소위 민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국가가 평화의 담론을 주도했다면 최소한 2018년 평화프로세스 분위기 이후 평화교육 및 문화의 형성 등 아래로부터 평화학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와 같이 장기적이고 다루기 힘든 분쟁(protracted and intractable conflict)의 경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평화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초국적 위협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평화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한반도 평화담론과 실천들은 분단체제, 정치적 중심의 단선적 논의, 이분법적 논의 등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 ‘평화’라는 본질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거나 논의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대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코로나 시대에 따른 새로운 평화구축이론은 세계적인 상호연관성과 보편적 함의를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담보하는 이중적 접근을 요구한다. 지역적 현실을 주목하되 세계적 차원의 지식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의 진전과 전 지구적 상호의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당면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 그린 뉴딜, 서해평화지대 활용, 남북한 생물권 보존지역 거버넌스 등이 생태환경적 문제가 있다. 새로운 쟁점과 문제들의 해결과정이 남북관계에서 농축적으로 결집된 시공간적 맥락과 상황을 중심으로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성과 지역성을 아우르는 총체적이고도 포괄적인 평화구상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21세기가 새로운 평화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 국민국가와 민족공동체의 맞물림과 어긋남,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연계, 비평화적 조건과 평화지향성의 미묘한 공존, 평화의 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차원의 긴장 등 평화학과 관련한 모든 이론적 논의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현실을 평화학의 관점에서 탐구할 때 구조적 제약과 실천적 공간, 국제적 사안과 민족적 과제,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지향 등 다양한 쟁점들을 탐색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차원의 새로운 평화학과 평화공존의 탐색은 비단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부딪치는 폭력과 평화의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과 상상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즉 한반도에서도 평화공존에 대한 새로운 흐름에 맞는 평화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에 의한 승자독식,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람과 자연을 무한 착취하는 생명경시, 생명의 도구화라는 폭력문화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전쟁을 넘어 인간 자신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에 주목해야 한다.

평화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평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평화구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래야 평화 지향적 사고를 통해 진정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원인이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구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역시 평화적 상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로 인해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며 평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은 남북대립과 폭력으로 파괴된 사회를 정상적 상태로 만드는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구축의 장기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하겠다.



**발표 2**

---

**SDG와 북한:  
'지속가능'과 '발전'의 긴장 가능성**

---

**이경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북한 '지속가능'과 '발전'의 긴장 가능성

이경수 선임연구원  
2020.12.16(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기후변화, 평화, 지속가능발전

- 국가별 차별적 기후변화 대응
  - 선진국: 글로벌 대응, 상대적으로 손쉬운 대응
  - 개발도상국: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발전의 기회'를 차단당한다는 주장
  - 저개발국/개발도상국으로서 북한이 직면한 도전
  
-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대응을 남북 공동으로 실천해 '평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 발전과 평화

- 발전+안보 넥서스
  - 저발전이 안보에 위협
  -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개념
  - 전제 1. 탈냉전 이후 내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증대  
2. 취약국가/실패국가 사례
  - 발전+안보 넥서스에서 발전+평화+인도주의 트리플 넥서스로 확장 중
  
- 북한에의 적용: '강한 국가'인 북한과는 전제가 어긋나나 발전의 달성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 도출 가능

SNU IPU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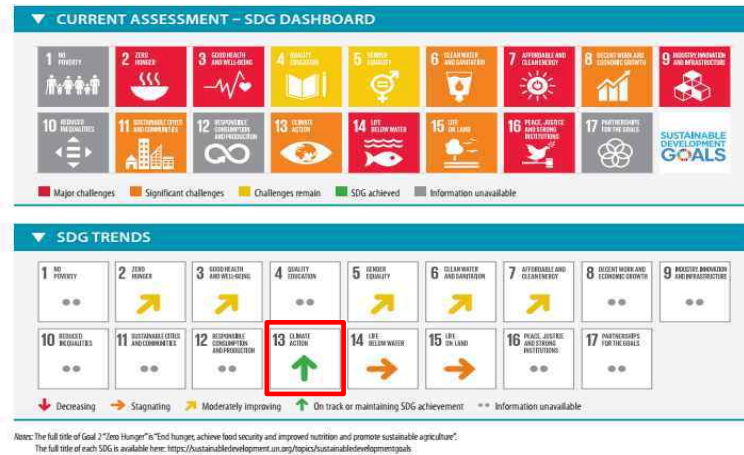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새천년발전목표(MDG)을 이은 글로벌 유엔 캠페인 (2015-2030)
  - 빈곤, 기아,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해상 오염 저감, 혁신적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등 17개 목표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채택
  - MDG 저개발국 집중 -> SDG UN 모든 회원국으로 행위자 확대



SNU IPU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 □ 북한의 SDG 참여 평가



Source: Sachs, J., Schmidt-Traub, G., Kröll, C., Lafortune, G., Fuller, G.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country profile: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https://sdgindex.org/reports/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19/>

SNU IPUS

## 북한과 환경

### □ 국제협약 가입 상황

-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가입
- 2000/2012 UNFCCC 하 '국가보고서' 발간

### □ SDG 설정 이후

- 2016.10 유엔총회 제2위원회 연설 통해 '2030 지속개발의정' 원칙적 지지 표명
- 2016. 10 UBC 공동 평양에서 '북한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국제회의
- 2019.12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 역량강화 사업 신청(제재 하 미집행)
- 2021.7 SDG '국가자발적보고서 (VNR) 제출 예정

SNU IPUS

## 북한과 환경

### UN-DPRK Strategic Framework

	2007-2009	2011-2015	2017-2021
원칙		새천년개발목표(MDG)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인권 기반 접근(양성평등) 환경 지속가능성 / 제도 지속가능성 회복력 / 결과 중심 관리(RMB)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관리 증진</li> <li>지속가능한 에너지</li> <li>환경관리</li> <li>식량 수급성 증가</li> <li>기본 사회서비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발전 (MDG1,3,4,6,7)</li> <li>지식과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MDG1,8)</li> <li>영양 개선 (MDG1)</li> <li>기후변화와 환경 (MDG1,7)</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 및 영양 안보 (SDG2,9)</li> <li>사회발전 (SDG3,4,6)</li> <li>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SDG 7,11,12,13,15)</li> <li>자료와 개발관리</li> </ol>
비고	WFP 긴급 운영 -> 2년 주기 개발사업으로 전환 FAO 긴급구호 -> 재활		

Source: <https://dprkorea.un.org/en/resources/publications>

SNU IPUS

## 북한과 환경

### 평양 상주 국제기구 (2019.10)

Premiere Urgence Internationale [프로미에 위르정스] (EU Programme Support Unit)	EUPS1	식량안보 농업, 건강, 물 위생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런]	EUPS2	
Concern Worldwide [컨선]	EUPS3	식량안보 농업, 물 위생
Deutsche Welthungerhilfe [독일세계기아구조]	EUPS4	식량안보 농업, 영양, 물 위생
Triangle Génération humaine [트리앙글]	EUPS5	식량안보 농업, 건강, 물 위생
Handicap International [핸디캡]	EUPS7	건강, 물 위생
SA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스위스	
FIDA Development Cooperation [피다]	핀란드	식량안보 농업
World Federation of Deaf [세계농인연맹]		
IFRC(국제적십자연맹)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Source: <http://www.koreanfriendshipnetwork.org/ngos-in-the-dprk>

SNU IPUS

## 북한과 SDG

- then WHY
- 가설1:국제협력을 통한 자원 획득 -> 저발전 극복 목표 우선
- 가설2: 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 증대 -> '발전의 생태적 위기'를 우회하는 발전경로 설정

SNU IPUS

## 북한의 환경담론

- 김정은 집권 이후 환경관심 증대
  - 집권 이후 첫 담화는 '산림복구'
  - 산림벌목, 돼기밭 단속 강화하고 산림조성 사업 실행 중
- '후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 '고난의 행군'시기 파괴된 자연환경을 재건함으로써, 당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
  - 김정은이 제시한 '강성국가'의 변용

SNU IPUS

# 북한의 환경담론

## □ 녹색발전

- 녹색제품, 녹색생산 등
- 지식경제시대, 선진 과학기술과
- 국제적 추세에 부응: ISO 14001



# 북한의 환경담론

## □ 두 가지 담론의 상호충돌 가능성

- 발전 우선인가, 환경 우선인가

## □ 발전의 생태적 위기?

- '의도치 않게' 환경 이용이 저조하고 저개발로 공동체적 정서가 잔존하는 국가로서 발전의 생태적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 □ 남북 생태협력 가능성

- 환경파괴적 개발을 우회할 수 있는 협력사업 실행
- 남북협력을 통해 SDG 공동협력이 평화를 배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향후 계획

- 두 가지 환경 담론의 존재 실증
- SDG 맥락에서 두 가지 담론이 조화될 가능성 질문
- 북한 SDG 달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평화 증진에의 함의
  - 생태환경협력을 돌파구로 한 남북협력 개시
  - 글로벌 목표와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을 통해 상호신뢰 증진
  - 북한 지역사회(community) 층위 남북협력 가능성 검토







**발표 3**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그린뉴딜’ 남북경협**

---

**윤석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그린 뉴딜' 남북경협: 재생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윤석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그린 뉴딜' 남북경협의 정의
- '그린 뉴딜' 남북경협의 추진배경 및 방향
- '그린 뉴딜' 남북경협의 추진방안: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Prezi

## '그린 뉴딜' 남북경협의 정의

### 1. '그린 뉴딜' 개념의 역사적 배경

-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행정부의 뉴딜(New Deal)  
- “잊혀진 사람들(the forgotten man)을 위한 신정책”
- 1990년대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그린 딜(Green Deal) 용어 사용 시작  
- 유럽 녹색정당들의 환경정치(Green Politics)차원
- 2000년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 EU 집행위원회 '그린 뉴딜' (2000), 2050년 기후중립대륙을 위한 '유럽 그린딜' (2019)



Prezi

## ‘그린 뉴딜’ 남북경협에의 정의

### 2. ‘그린 뉴딜’ 남북경협에의 개념화

• 한반도 맥락에서의 '특수성'과 지구적 차원에서 '일반성' 반영

(1) 1990~2000년대 초창기 남북경협사업 모델의 한계 극복

- 1960~70년대 남한 경제성장 경험에 기반한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
-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경협사업의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불안정성 (정권교체, 대북제재)

(2) 지난 20여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에서의 변화 반영

- 새천년개발계획(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발전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으로의 발전



## ‘그린 뉴딜’ 남북경협에의 정의

### 2. ‘그린 뉴딜’ 남북경협에의 개념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남북경협 모델”



## ‘그린 뉴딜’ 남북경협 추진 배경

### 1. 북한의 그린 뉴딜 남북경협 추진 필요성: ‘그린’을 중심으로

-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진화

#### • 법률적 발전

- 사회주의헌법 개정(1992), 환경보호법 개정(2001), 재생에너지법 채택(2013)



#### • 제도적 발전

-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교류사(PIINTEC) (2003), 조선록색기금(Korea Green Fund) (2014)

#### • 정책적 발전

-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5개년 계획(2001),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2014)



## ‘그린 뉴딜’ 남북경협 추진 배경

### 2. 남한의 그린 뉴딜 남북경협 추진 필요성: ‘뉴딜’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남북관계 교착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로서의 창의적인 남북경협 필요

- 20여년 전 맥락에서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 중심의 과거 남북경협 모델 진화 필요



## ‘그린 뉴딜’ 남북경협을 추진 방향

- 첫째, 장기적으로 적용될 전략적 원칙 차원에서 남과 북이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최상위 목표 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의 담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모색
  - 한반도 지속가능개발(Korean peninsula SDGs) (김태균, 2020)
- 둘째, 중기적으로 적용될 전략적 원칙 차원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대북제재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실현가능한 창의적 접근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 일종의 ‘교차거래’를 통해 비대칭적 상호 이익 설정된 영역들에서 복합적이고 간접적인 방식 경제협력 설계
- 셋째, 단기적으로 적용될 전술적 원칙 차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조건들 속에서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대북제재면제조치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인도주의적 차원의 적용 예외(Humanitarian Exemption Requests) - \* A-p.18

## ‘그린 뉴딜’ 남북경협을 추진 방안: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1. 평양종합병원 재생에너지 기반 무정전 전원장치(UPS) 협력사업(안)
2. 현대그룹 7대 SOC 사업권에 기반한 금강산댐 수자원 활용(안)



---

## 토론요약문 & 자유토론 및 답변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김태경**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경희** 세계자연기금







## 토론 요약문(녹취)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첫 번째 황수환 선생님 발표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제시하자면, ‘인간 중심’의 생태평화 구축은 포스트휴먼 개념이 대두된 현 논쟁 지형에서 인간 아닌 다른 생물들과의 공존문제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류 중심주의가 초래한 기후변화 등의 생태위기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를 넘어선 평화개념을 도입할 때 발표자가 제시한 생태평화 개념에 보다 부합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이경수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합친 정치적 개념으로, 성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주류 논의는 개발이 아닌 발전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양립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성장, 즉 GDP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경제성장 중심론은 반대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은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성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역시도 탈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저발전 국가이므로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생태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윤석준 선생님이 ‘sustainable development’의 번역어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사용한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을 지양하면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개발’이라는 말은 자연을 파괴하는 인위적인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발표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 긍정적인 면을 갖추었으나, 북한과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질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대안으로 녹색평화, 녹색전환을 남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녹색전환(transformation, transition)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바꾸어 나가자는 주장은 생태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가운데 놓고 세 가지 축-생태민주, 생태평화, 생태발전-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첫째, 생태민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치 공동체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어 나가는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생태평화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서 다른 국가나 정치공동체와 함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평화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생태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생태적인 발전은 불가피하다.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발전이 이루어질 때 적극적 의미의 평화와 사람들의 임파워먼트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태적인 발전이나 전환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우선, 중국 모델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환경파괴가 심했으나 약 20년 전부터 ‘생태문명’ 개념을 기반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환경 파괴 이후에 사후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생태적 근대화’ 개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통합적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강한 생태적 근대화’ 개념에서 보면 시민사회 참여가 중요한데, 북한의 시민사회가 저발전된 현재 상태를 고려한다면 실제 생태적 근대화는 중국 모델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 생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한다면 다른 경로를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에 생태발전을 통한 생태평화 개념을 도입하려면, 생태평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관점이란 지구의 관점,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관점,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 세계시민주의 관점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위기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힘든 취약한 사회나 국가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생태발전과 생태평화의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이 있는 한반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태경(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첫 번째 발표자가 언급했듯, 새로운 평화개념이 필요하고 평화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의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신 평화개념은 북한에 적용될 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융합적 평화를 말할 때, 치유와 관용, 용서와 평화를 얘기할 때는 인간중심의 평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로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평화개념의 상충이 나타난다. 평화부터 얘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 평화의 정착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포용이 첫 단계라면, 포용하는 자의 아이덴티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발표를 유사한 층위에서 논하자면, 새로운 평화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북한을 한반도 평화개념에서 묶어서 다룬다고 할 때, 북한은 핵을 가진 저개발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생명공동체 아이디어가 협력의 여러 차원에서 어떠한 비중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다시 말해, 남북경협에서의 생명공동체가 협력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 것일지 문제제기한다.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첫 번째 발표에서 다뤄진 quality peace의 개념적 논의는 현재 유럽에서 중요한 논의의 지형을 담당하고 있다. 노트르담 대학에서는 전략적 평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의 혼종성과 관련이 있다. 평화라는 개념은 확장성이 매우 강하여 분석이 어려운 문제를 지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후 변수를 하나씩 빼가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케이스를 도출하는 성공적인 요인으로 꼽히는데, 북한의 평화라는 다양한 변수 중 유의한 것을 가려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의 주요 논점을 연결지어 북한의 SDG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SDG에 있어 북한이 우리와 특수적 관계, 즉 같은 민족임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글로벌 규범이 들어오면서 어떤 특수적 관계를 보편화할 수 있을까, 혹은 글로벌 규범을 어떻게 특수한 개별 케이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나아가 그 둘의 교집합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생에너지는 그러한 교집합 중 하나이며, 이를 포함한 교집합들을 북한 SDG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북제재와 비핵화가 풀리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8년에 걸쳐 노동신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에너지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다양한 맥락에서 두 단어가 많이 나오고, 2015년부터는 사용 빈도가 폭증할 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다. 북한이 해당 이슈들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단순히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이슈를 둘러싸고 외교의 다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외교의 다변화란, 기존의 중국, 미국 양자관계를 중시하던 기존 태도를 떠나, 더이상 중국도 믿을 수 없고 미국과의 협상 결렬로 인해 더 받을 것도 없다는 제재 국면에서의 위기의식과 이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외교 형태다. 이러한 다변화의 전략으로 SDG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UN framework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SDG는 내부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내부의 확장성을 외부, 글로벌 무대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남북협력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북한에서 거부할 확률이 높다. 다자외교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직접협력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동시에, 현재까지의 북한의 행보를 보면 UN 무대에서는 오히려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실례로, 한국은 VNR을 이미 2016년에 냈고, 북한은 내년 7월에 제출 예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면 지역 단위로 함께 VNR을 제출한 경우가 꽤 있으며 유엔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이웃 국가와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지니는 강점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VNR을 같이 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집합적 접근법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DG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상당히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로 SDG를 이행하고 있다고 홍보 중이며, 베트남은 국가발전전략이 결국 SDG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역시 노동신문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국가발전전략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표현한다.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내년 당대회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은 국가 정당성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SDG를 북한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도 전략화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략화된 부분을 찾아내서 한국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통일연구원에서 프로젝트로도 다루고 있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북한이 현재 SDG에 대한 VNR(volunteer national review)을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다. UN 지역포럼에 이미 북한이 세 번 참여해 어떻게 SDG를 이행할 것인지 세 번 모두 발표를 했다.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큰 흐름에서의 이행방안에 재생에너지, 산림녹화가 포함되며, 식량도 등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SDG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지는데, 북한은 발표를 통해 17개 목표 모두를 이행하고, 다만 169개 세부목표가 아니라 86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체계에 대한 것도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행체계가 현재 엉망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행체계가 당 수뇌부부터 마을단위까지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래프까지 마련하였다. 북한이 전략적, 국내적으로 SDG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SDG는 4가지 측면에서 특히 북한에게 중요한 자산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제적 규범인 SDG의 국내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북제재로 인해 막혀 있는 국제원조와 협력을, SDG를 이행하겠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 셋째, 북한의 발전 전략을 특유의 폐쇄적인 모습이 아닌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 SDG 규범과 함께 간다는 인식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넷째, 국가발전전략의 정당성 홍보에 글로벌 규범인 SDG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속가능성과 발전의 긴장관계에 대해 첨언하자면, 해당 논의는 이미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써 핵심 주장에 따라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와 shared responsibility의 두 진영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후자는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이며, 책임을 나누어 짊어질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개발도상국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두 가지가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짚고 싶다.

## 이경희(세계자연기금)

세 번째 발표는, 전지구적 그린뉴딜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대응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북제재 상황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였고, 기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간 기술협력의 사례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북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상황에 대한 평가가 문헌마다 상이하고, 그 발전 정도가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나아가 현재 정부 주도 개발협력적 성격을 띠는 남북경협이 다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스트롬이 제기한 지속적 협력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건 개념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 중 첫째는 병존하는 제재로,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에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상대가 인지하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행위자간의 신뢰, 셋째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다. 세 번째 발표의 내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남북경협에서 한계로 꼽힌 것 중 하나가 반복적인 중단 문제인데,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

두 번째 발표자가 지적한 국가별 차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첨언하자면,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수준의 합의는 92년 리우에서 이루어졌으며 94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다. 97년에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진 후 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는데, 2011년 더반 총회에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신기후체제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신기후체제란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국가별 기여 방안이다.

큰 패러다임 체제에서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의 취임 이후 다시 파리협약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중국 역시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기후변화를 도전으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삼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류가 형성중이다. 개발도상국 경우에도 선진국 등과 개발협력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요청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 더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첨언한다.

첫째, 북한의 환경과 발전의 상호영향 가능성에 대하여, 비단 북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글로벌 목표와 배치되지 않되 남북이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협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자면, 세 번째 발표에서 제시된 그린뉴딜 협력이 하나의 일환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력 불안정 때문에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만들어야 했던 국내적 필요성과, 국제적 수준에서는 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며, 한국 또한 당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NDC

의 목표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2016년 최초 NDC 제출시 2030년까지 8퍼센트가량 온실가스를 감축,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40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목표를 더욱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9.4퍼센트,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을 경우 나머지 36퍼센트를 더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의 경우 37퍼센트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안에 국내와 국외 감축분이 나뉘어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력수급 부족 해결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들에 대해 상호보완해 가며 공동의 NDC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토론 및 답변 & Closing

### 구갑우(북한대학원대)

북한의 인식 변화에 따른 지적이 많은데, 북한 핵실험은 환경보호법 위반이다.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핵실험 금지되어 있다. 환경보호법 개정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생태환경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다.

### 송경호(자유토론)

몇 가지 북한 환경 관련 포스터를 소개한다. 북한의 가정용 솔라 패널이 거의 최고 수준이고, 물론 전력난 해소 차원이다. 여명거리가 녹색주거의 모범으로 건설 중이다. 2015년 이후 환경 문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 황수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구도완 선생님 말씀처럼 비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한반도는 소극적 평화 그 자체만이라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인간-개인이 참여하고,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다. 그게 된다면 생물권 차원으로 확장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공부하면서 김태균 교수님의 전략적 평화론을 봤는데, 매우 어려웠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생태적 관점이 어떤 관점일까 고민 중이었는데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하다. 비핵화 논리가 성립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정치군사적인 문제에서 과연 끝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과 생태문제는 같이 간다. 후쿠시마만 봐도 오염수 방출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평화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평화를 전쟁 회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양질의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김태경 박사가 쿠팡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남북교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인도지원을 넘어서서 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지 않는 평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교류협력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을 만드는 것도 평화학의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이경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구도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장과 발전의 문제를 착각한 점이 있다. development가 개발이 아니라 발전으로 얘기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제개발, 개발협력으로 원용을 한다. 발전이 갖는 범위와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김태균 선생님과 관련해서, 남북협력이 북한 당국 공식 차원에서 접촉 금지된 상황이다. 다자협력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협력 금지는 현재의



입장이다. 이 돌파는 남한 당국이 해야 한다. 신한반도경제지도, 경제협력이 현 정책인데, 이것을 넘어서 북한과 공감할 수 있는 것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는, 오래 전부터 인도적지원도 정치화되었는데, 환경과 생태가 한 가지 비정치화된 영역이 되기를 바란다.

SDG 이행체계 마을 단위는 리 단위일 듯한데.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언젠가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방식의 커뮤니티 개발협력 연구를 하고자 하고, 리 단위가 될 것 같다.

생태와 환경 관련해서 북한의 무역회사가 중국에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했다. 동유럽 기업인데, 환경 문제가 북한에 있어서도 개발, 성장, 무역에 있어서도 예의주시한다는 말씀 드린다.

### 윤석준(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구도완 선생님처럼 코로나를 거치며 비인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과거 라투르가 브런치 세미나에서 가이아와 관련한 책을 냈다. 나중에 인간이 지구로부터 버림받는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개발과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에 백이십 퍼센트 동감하나, 번역어의 문제가 사실 민감하다. 김태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SDG와 관련해서도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 통해서 많이 발전시켜 나가겠다. 남한에 얽매인 사고를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양자 넘어 다자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김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생명공동체가 과정인지, 목표인지, 수단인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인간의 행복이 종착점이라면 통일, 평화 또한 시야를 넓혀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도 목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북한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전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발생한다. 금강산 화장실을 지을 때 북한의 환경보호 기준이 높아서 일본에서 수입해 적정기술을 도입한 적 있다. 케이블카 건설, 금강산 내 쓰레기 투척, 모두 민감하게 북한이 받아들인다.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노동력, 자원 활용 방식은 북한의 현재 역량을, 현재 기술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우리가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제프리 삭스 원조 찬성, 이스털리 비판론, 담비사 모요의 다른 맥락의 비판이 있다. 정부 주도 접근의 한계를 남북경협에서 봐서, 민간, 비정부-시민사회, 자본 다 포함해서 주도하고 정부는 프레임을 갖추고 지원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지 주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린뉴딜 또한 비정부 주도, 정부 프레임핑과 지원, 시장 실패 보완으로 생각한다.

###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도 제3세대 인권, 발전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development가 타동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다. 우리가 ‘발전시키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닐까. 신한반도 포함, 경험 모델은 ‘타동사’적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렵다. 상호의존성이 높아질 때 오히려 취약성 높아지는 것처럼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게 남북관계 딜레마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한반도 교환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분업, 자본과 기술/노동력 분업 도식으로는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자협력은, 우리가 쌀을 WFP를 통해 지원한다 했을 때 국가조절위원회가 거부한 적이 있다. 북한 내의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거부했다.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매개로 한 남한의 지원도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한 적이 있다. 우리 내부의 변화를 통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평화 모델로서 남북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